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76호
2020.9.28

정책동향

- 도시재생, 공공재개발과 효율적 연계 필요
- 공공 기반시설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 역량

시장동향

- 여성 건설기술인 증가 추이와 기술 등급 현황

산업정보

-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동향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화증편향과 정부

社告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5일 자 건설동향브리핑은 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도시재생, 공공재개발과 효율적 연계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효용에 대한 논란 발생, 자원 배분 고려한 사업 유형 선정해야 -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총 23곳 선정(9.16)

- LH, 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8곳 선정됨.
 - 중심시가지형¹⁾ 4곳(경남 밀양, 충북 제천, 서울 성북, 대전 동구)과 일반근린형²⁾ 4곳(강원 철원, 전북 익산, 경기 하남, 경북 칠곡)이 선정됨.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재생 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한 인정사업 방식으로 총 15곳이 선정됨.
 - 위험건축물 정비, 장기 방치 건축물 재생, 노후 공공시설 활용, 유휴 공공공지 활용 등을 통해 돌봄·문화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이 공급될 예정임.
-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2조원이 투입되며, 공공임대 1,275호를 비롯한 총 2,100여 호의 주택,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 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예정임.
 - 10월, 12월 2차례에 걸쳐 추가 선정할 계획임.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서 도시재생사업 중복 배제 논란 발생

-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됨.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함(9.17).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음.
 -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이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지역에서 사업 추진

1) 과거 행정업무상업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공공기능상권의 회복과 활력 증진.

2) 주거자상권 혼재 지역에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을 원하면서 논란이 발생함.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배제를 결정함.
- 반면, 창신·송인 등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추진을 원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서울에서 13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거지 재생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존재함.³⁾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간 효율적인 추진 필요

-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자체 및 주민들의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이 요구됨.
 -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적 기반을 공유함.
 - 도시재생의 원취지는 기존 정비사업과 같이 민간의 수익성에 기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을 재생하는 것임.
 -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주거지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면 주거지 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점진적인 개량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철거 후 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대상 지역의 사업 여건과 공공의 역할 분담 수준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도시를 재생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도시재생특별법」에서도 재개발이 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음.⁴⁾
 -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 재원이 필수적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유형이 가장 효율적인 도시재생 수단이 될 것임.
 - 최근 개정된(9. 1)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이 포함되었음. 공공재개발 추진시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의 직접 재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광의의 도시재생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효용성은 여전히 큼.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틀 내에 끌어들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적 조치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3) 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임에도 사업 대부분이 기념관, 도서관, 역사관 등 문화 관련 사업 중심인 데 대한 비판 제기.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2조 1항 7호 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공공 기반시설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 역량

-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급속, 선제적 관리와 전략적 투자를 위한 역량 확보 필요 -

■ 사회기반시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은 1970~199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다수 건설되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 도로, 철도, 항만 등 중대형 사회기반시설 중 건설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의 비중은 현재 36.8%이며(2018.12월 기준), 20년 후에는 그 비중이 7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⁵⁾
- 이에 따라 올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고, 「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발표되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할 것이며, 현시점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 체계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

■ 기반시설관리의 핵심 역량과 진단 모델

- 시설의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능, 수요, 가치 등을 예측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고,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량을 확보해야 함.
 - 기반시설관리의 핵심 역량은 국제 표준인 ISO 55000 시리즈와 글로벌 기준인 IIMM, PAS 55, IAM 역량 프레임워크 등에서 제시하는 자산관리 중요 요건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식인 Plan(계획)-Do(실행)-Check(확인)-Act(개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반시설관리에는 ‘자산기획관리’, ‘통합관리’, ‘운영관리’, ‘성과관리’의 역량이 필요함.
 -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수립이 중요함. 시설의 중장기적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자산기획관리’와 실질적인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통합하는 ‘통합관리’ 역량이 여기에 속함.
 -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운영관리’, 시설물과 시설자산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성과

5) 국토교통부,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

관리' 역량 또한 필요함.

- 또한, 기반시설관리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량이 있어야 함.
 - '가치 및 자원관리'는 정밀한 예측과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며, '변화관리', '리스크관리', '정보관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역량임.
 - '계약관리', '인적자원관리' 역량은 관리 업무의 난도 증가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해야 함.
- 기반시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현재의 강점과 약점 역량을 분석하고 부족 역량을 향상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
 - 역량진단 모델은 기반시설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 역량 세부지표, 그리고 역량 및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고려한 역량진단 지수로 구성됨.
 - 제안된 핵심 역량과 역량 세부지표는 국제 표준과 국내 법령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기반시설관리 업무 파악에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역량진단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핵심 역량 및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통해 우선하여 갖춰야 할 시설자산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핵심 역량의 중요도 조사 결과, '운영관리', '가치 및 자원관리', '자산기획관리', '정보관리'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기반시설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 각 기관의 기반시설관리 역량은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시설관리법」의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며, 시설자산관리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 기반시설의 자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정비, 국내 기반시설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시설자산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요소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 해외에서 시설자산관리가 본격화된 상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 여력 부족 현상이 시작됨. 이에 따라 시설의 상태와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보고 의무화, 회계기준 정비 등의 법적 기준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공공기관들은 시설자산관리 수행에 필요한 세부 기술과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시설의 수명 예측, 가치 평가, 미래 수요와 서비스 수준 분석, 생애주기 비용 최적화와 같은 요소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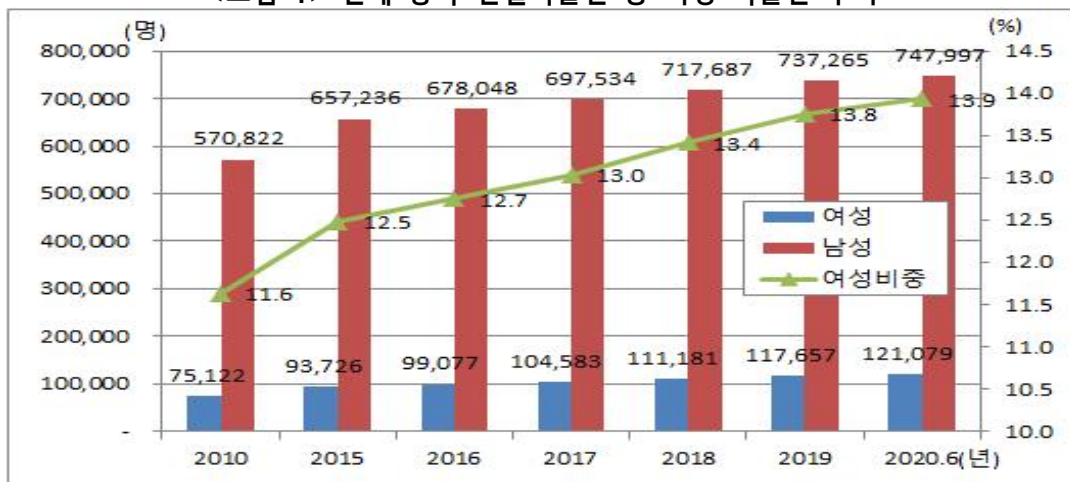
여성 건설기술인 증가 추이와 기술 등급 현황

- 여성의 건설업 참여 의지 확대되나 성장을 막는 벽 여전히 높아 -

■ 지난 10년간 여성 건설기술인 연평균 증가율, 남성 및 전체 기술인 증가율 상회

- 2020년 6월 말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여성 기술인의 비중은 13.9%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2.3%p 증가함.
- 2010년 말 기준 7만 5,122명에 불과하던 여성 기술인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2만 1,079명으로 지난 10년간 4만 5,957명 증가함.
- 10년간 여성 건설기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남성 건설기술인(2.7%)과 전체 건설기술인(3.0%)을 상회하여 산업 내 젠더(gender)의 벽을 허물고 건설업에 진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 기술인들의 의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전체 등록 건설기술인 중 여성 기술인 추이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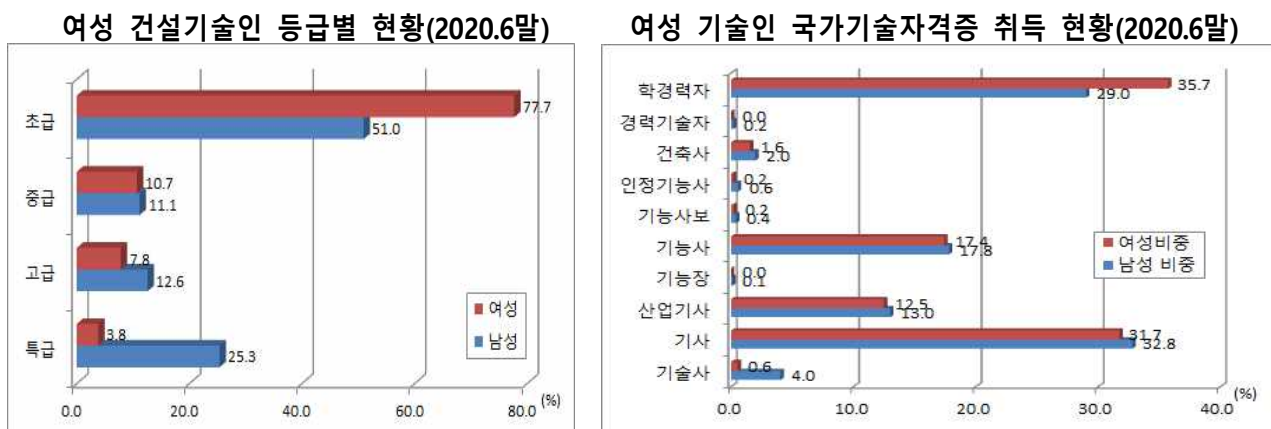
■ 여성 건설기술인 중 상위 등급 기술인 및 기술사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 2020년 6월 말 기준 여성 건설기술인 중 특급 기술인의 비중은 3.8%에 지나지 않으며, 기술사는 0.6%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2020년 6월 말 기준 여성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현황을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보면 특급 기술인의 경우 2,044명(2.8%)⁶⁾에서 4,607명(3.8%)으로 1.0%p 증가하였으며, 고급 기술인은

2,341명(3.2%)에서 9,466명(7.8%), 중급 기술인은 5,233명(7.1%)에서 1만 2,919명(10.7%)으로 각기 소폭 증가함. 다만, 초급 기술인의 경우에는 7만 4,161명(87.0%)에서 9만 4,087명(77.7%)으로 그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는데, 이는 최근 신규 여성 기술자의 진입이 감소한 데서 기인함.

-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여성 기술인의 등급별 현황을 남성 기술인과 비교해 보면, 특히 최상위 기술인 등급으로 분류되는 특급 기술인의 경우 남성 기술인의 경우 25.3%인 반면, 여성 기술인은 3.8%에 불과함.
- 한편, 2020년 6월 말 기준 여성 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동향을 2010년과 비교해 보면, 기술사는 335명(0.4%)에서 673명(0.6%)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사 2만 5,515명(34.0%)에서 3만 8,438명(31.7%), 산업기사는 1만 1563명(15.4%)에서 1만 5,143명(12.5%)으로 각기 증가함.
-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 여성 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을 남성 기술인과 비교해 보면, 특히 최고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의 경우 여성은 전체 여성 기술인의 0.6%에 불과했지만, 남성은 4.0%(3만 267명)로 여성 기술인의 비중이 3.4%p나 낮음.

<그림 2> 여성 건설기술인 현황



■ 여성 기술인이 중도 포기 없이 상위 자격 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불공정 요소 없애야

- 건설업에서 여성 인력 취업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인력 취업에 대한 장애요소로 현장의 조직적 방해(sabotage)와 승진의 투명성 부족, 교육훈련 기회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7)
- 이 외에도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 역시 건설산업에서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됨. 8)

김민형(선임연구위원 · mhkim@cerik.re.kr)

6) ()안은 전체 여성 기술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이하 동일.

7) ENR(2018.5.24), "Construction Industry Women Seek Strategies, Allies To Boost Impact".

8) The New York Times(www.nytimes.com), "Japan Wants More Women in Construction. Pink Toilets May Not Be Helping", 2018.3.8.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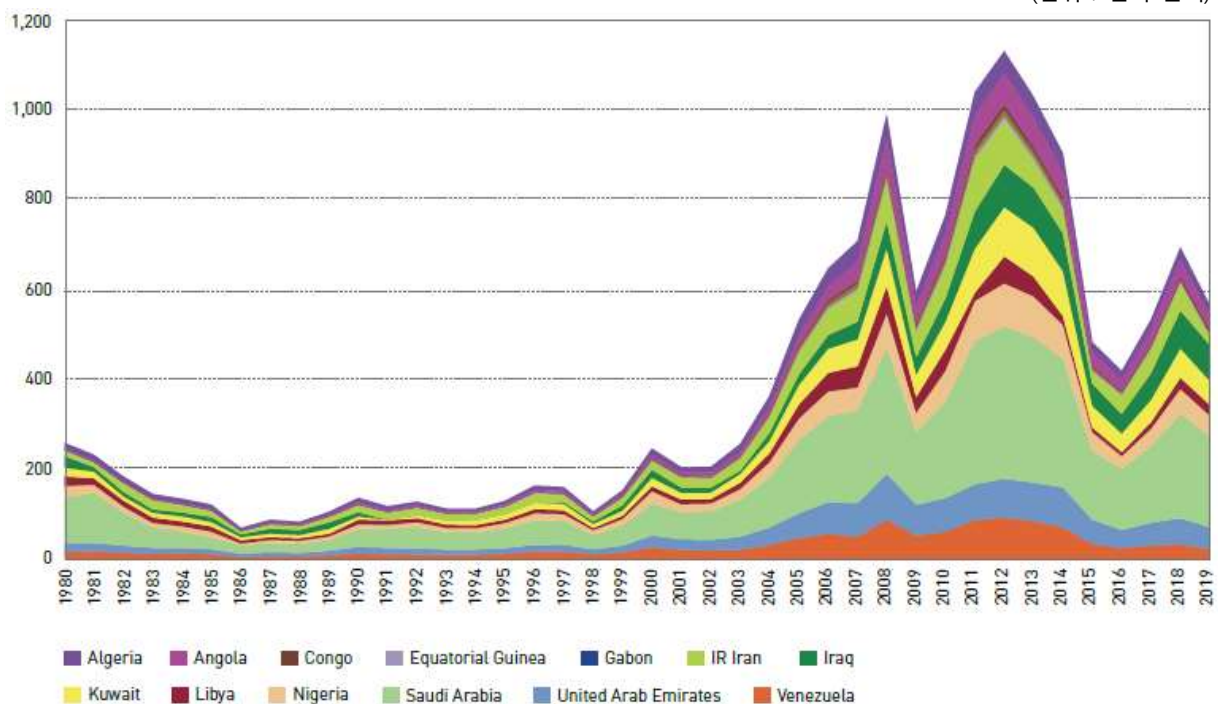
- 2019년에 전년 대비 18.5%↓, 환경 변화 모니터링하고 해외수주 전략 세워야 -

2019년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 총액, 5,6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감소⁹⁾

-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은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6년(4,182억 달러)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9년에 내림세로 전환됨.
- 2019년 석유 수출액은 1.13조 달러를 기록한 2012년의 절반 수준이며, OPEC 회원국의 기준유가도 64.04달러로 전년 대비 약 9% 하락함.
- 2019년 OPEC 회원국의 일평균 석유 수출 규모는 22.5백만 배럴로 전년에 비하여 7.4%(1.8백만 배럴)나 감소하였으며, 회원국의 일평균 석유 생산량도 2018년에 비하여 6%(1.86백만 배럴/일) 감소하였음. 반면에 비OPEC 회원국의 일평균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1.3백만 배럴/일) 증가함.

<그림 1>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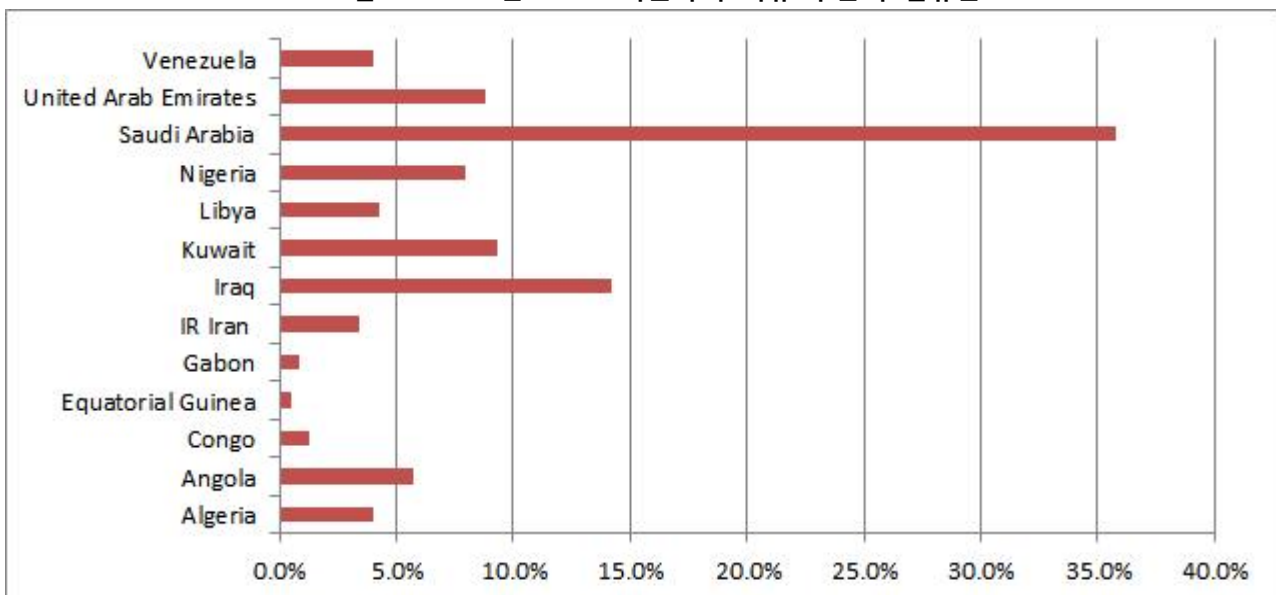
자료 : OPEC.

9) 2020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에서 제공된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 전체 수출액 중 국가별 비중은 사우디 35.8%, 이라크 14.2%, 쿠웨이트 9.3% 순

- 1996년 이후 OPEC 전체 수출액에서 29~34%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33.4%)에 이어 소폭 상승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13.7% 감소한 2,02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이라크(800억 달러), 쿠웨이트(524억 달러), UAE(496억 달러), 나이지리아(451억 달러) 순임. 수출액 규모 상위 5개국이 OPEC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임.
- 경제 제재로 인해 2012~2015년 사이 석유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이란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2019년에는 2018년(605억 달러) 대비 69%나 감소한 192억 달러에 그침.

<그림 2> 2019년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 점유율



자료 : OPEC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은 향후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 첫 번째 요인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 경기 회복 시나리오의 형태와 무관하게 향후 석유 수요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 요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석유 성장 시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OPEC 회원국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주력 수주 시장임을 감안할 때 석유 수출 감소에 따른 국가별 정책 전환 등의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주관기관	주요 내용
9.17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분쟁조정 제38차 심사소위원회에 기술경영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
9.17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43차 회의에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 참여
9.25	대한상공회의소	• 공제사업 전문가 회의에 경제금융연구실 김정주 연구위원 참여

주요 발간물 및 활동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 이슈 포커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 목표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억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장수명화로 요약됨.•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2000년 16조 1,000억원(2015년 실질가격 기준)에서 2017년 12조 7,000억원으로 17년간 연평균 1.4% 감소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건축물 시장은 신축이 주도하고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는 상대적으로 위축됨.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유지·보수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지만, 저성장 추세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년 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17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시장은 신축 중심이지만,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 전체 건축물 착공면적 중 리모델링의 비중은 2002년 13.3%에서 2019년 18.5%로 증가하는 추세임.- 비주거용 리모델링은 동식물 관련 시설, 공장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매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비주거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주거용 리모델링 비중은 감소함. 주거용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건축물 유지·보수 및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통합한 전체 시장은 2020년 30조원으로 추정되며,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table><tr><th>구분</th><th>2020년 (십억원)</th><th>2025년 (십억원)</th><th>2030년 (십억원)</th><th>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th></tr><tr><td>건축물 유지·보수 시장</td><td>12,795</td><td>13,759</td><td>14,723</td><td>1.4</td></tr><tr><td>건축물 리모델링 시장</td><td>17,293</td><td>23,321</td><td>29,350</td><td>5.4</td></tr><tr><td>합계</td><td>30,088</td><td>37,080</td><td>44,073</td><td>3.8</td></tr></table>	구분	2020년 (십억원)	2025년 (십억원)	2030년 (십억원)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	12,795	13,759	14,723	1.4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17,293	23,321	29,350	5.4	합계	30,088	37,080	44,073	3.8
		구분	2020년 (십억원)	2025년 (십억원)	2030년 (십억원)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	12,795	13,759	14,723	1.4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17,293	23,321	29,350	5.4																		
합계	30,088	37,080	44,073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안전성 강화 : 내진 보강에 따른 비용 보전,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주차장 규제 완화 : 용도전환 등 건축물 리모델링 시행시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적용 필요-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 공공기관 대상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적용, 제로 에너지 등 녹색 건축 리모델링시 건축,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 지원-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 저개발 지역의 실질적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확증편향과 정부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의 경향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확증편향은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이며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주로 생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 감정이 앞설 때 또는 뿌리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도 발생한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하거나 자신과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신하기도 하며 과학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고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취사(取捨)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사람은 누구나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종종 확증편향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 결정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8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의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에는 국회 교통위 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관해 질의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는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살펴보자. KB부동산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 2,292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5억 3,587만원에 대비 약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국한하면 상승 폭은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 708만원에서 9억 5,033만원으로 약 64%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509만원으로 집계됐다. 양 기관 모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 5,000만원 이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김현미 장관이 답한 일부 아파트를 모아놓은 데이터라는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한 정부의 태도 또한 확증편향으로 보인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세제 혜택 축소,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임대사업자들이 이익단체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창설하고 헌법소원을 가시화하는 등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물론 문의조차 묵묵부답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면 확증편향으로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사의 약점을 찾고 편향성을 점검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過誤)가 될 수 있음을 정책 결정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일보, 2020.9.1>